

99% 국민이 활짝 피는 그 날까지...

사랑아,
활짝 피어라!



서민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자유를! 한반도에 평화를!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사람·민생·민주·평화의 가치에 기초한
7대 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

4 월 이 오 면

가 날 뜬 가 지 에 도 꽃 은 피 리 니

사 람 아 , 눈 물 을 건 자

사 람 아 ,

사 람 아 활 짝 퍼 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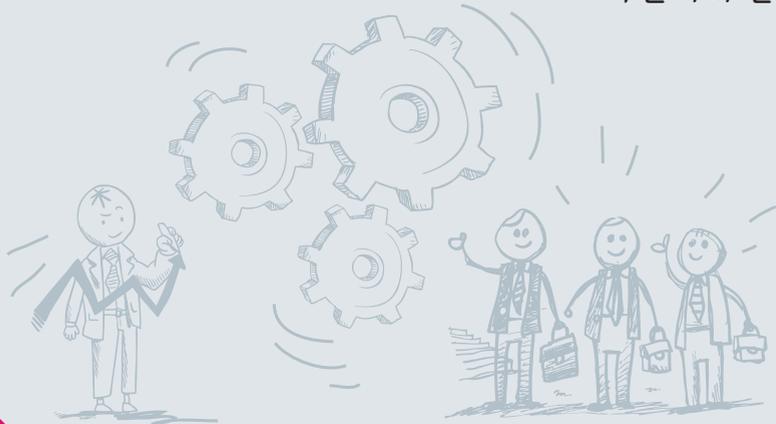
희망의 2013 ~ 2017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7대 비전

좋은 일자리가 활짝!	비전1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4
서민경제가 활짝!	비전2 경제민주화와 민생안정 8
복지혜택이 활짝!	비전3 보편적복지 확충 14
한반도 평화가 활짝!	비전4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22
지방도 수도권도 활짝!	비전5 성장동력 확충과 국가균형발전 26
내일의 삶이 활짝!	비전6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34
공정한 세상이 활짝!	비전7 MB 역주행 심판과 권력 개혁 40
재정 건전성이 활짝!	7대 비전 실현에 필요한 소요 자원 조달 방안 44

좋은 일자리가
화장작!

99% 국민에게 펼쳐집니다



[비전]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3대 정책약속

1. 5년간 새로운 일자리 330만개를 만들겠습니다.

-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63% → 70%로 제고
- OECD 최장인 실질근로시간(연평균 2,193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일자리 나누기
- 보편적 복지실현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친환경 녹색 일자리 증대
- 직업훈련과 공공고용서비스를 강화하여 취업난과 구인난 해소
- 전문계 고교 활성화 등을 통해 고졸자 취업기회 획기적 확대

2. 같은 일에는 같은 임금을 지불하겠습니다.

- 현재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5% 수준으로 축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해소
- 최저임금을 전체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
- 현재 1,336만명(전체 취업자의 59%)에 이르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
-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집단 정리해고 규제

3. 노사가 협력하여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국제노동기준에 입각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사각지대 해소
- OECD 최하위수준인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여 노동자간 격차 해소
- 전임자임금 노사자율 및 복수노조 자율교섭권의 보장
-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대폭 축소
- 노사간 신뢰제고와 협력적 노사문화 형성을 위한 노동자의 경영참여 확대

국민 경제가 활짝!

99%의 경제가 펼쳐집니다



(비전2)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안정을 위한 6대 정책약속

1. 재벌의 횡포를 막아 드리겠습니다.

- 10대 재벌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여 경제력 집중과 무분별한 계열 확장억제
- 상호출자의 탈법적 회피수단인 '순환출자'를 금지
- 지주회사를 통한 편법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 강화
-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 강화
- '담합·납품단가 부당인하·일감 몰아주기' 등 3대 불공정 거래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담합 등 중대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
- '유전무죄' 풍토근절을 위해 '기업범죄'의 처벌 강화

2.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1% 슈퍼부자들의 세금을 제대로 걷겠습니다.

- 불합리한 조세감면의 정비, 음성탈루소득의 과세 강화, 조세부담률의 적정화로 과세공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복지재원과 재정수입을 확보
-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과표 '3억원' → '1.5억원' 초과로 하향조정
- 법인세 과표 및 세율 '200억원 초과 22%' → '500억원 초과 25%'로 조정하여 대법인에 대한 특혜성 MB감세 시정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재 '4천만원' →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및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중고자동차 등 실수요자 거래에 대해 마진과세 도입, 카드수수료가 낮은 '좋은 카드'에 대해 소득공제 우대 등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편의 증진
-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법인세 강화

3.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여 중소기업 육성 강화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하여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방지
- 납품단가 부당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중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1.5% 이하로 인하
-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강화 등 자영업자 지원책 강화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고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 '대형마트·SSM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회복

4. 금융기관을 제대로 감독해 억울한 피해를 막겠습니다.

- 서민과 영세상공인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감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분리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추진
- 금융 공기업에 대한 MB식 민영화 재검토 및 금융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유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의 공공성 확보
- 자본시장의 공공성 회복 및 소수주주 보호 강화

5. 서민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대통령 직속 '민생안정특위'를 만들어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민생문제 해결
- '따뜻한 금융'을 통해 가계부채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 추진
- 대부업체 이자율 한도를 현행 39%에서 30%로 인하하고 불법행위 처벌강화
-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서민부담 경감
- 유류세 탄력세율의 신속적 운영, 할당관세인하, 적정 환율 유지, 유가결정구조의 투명화 등을 통해 고유가로 인한 서민부담 경감
- 기본료, 가입비, 문자메시지요금의 폐지 등 가계 통신비의 획기적 경감 추진
- 전월세 상한제,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도모
- 생활물가를 안정시켜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

6. 농민과 어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 식량자급률을 2020년까지 65%로 높여 먹을거리 안정적 확보
- 농림수산분야 IT 융합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미래 농어업에 대비
- 쌀 목표가격의 현실화와 고정직불금 인상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 정부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와 농신보 심사지원 체계 개선
-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 도시민들의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지원 확대
- 신선 수산물의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어민수익 증대와 저렴한 공급
-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과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효율적 단속 방안 마련

복지 혜택이 확장!

99% 국민에게 골고루 펼쳐집니다



(비전3) 보편적 복지 확충을 위한 10대 정책약속

1.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모든 0~5세 아동의 보육비용 전액을 현행 정부지원 단가에서 표준보육비용으로 현실화하여 질 높은 무상보육 실현
- 국·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을 현재 영·유아 인원대비 20%에서 40%로 확대
- 육아지원종합센터 설치와 보육서비스 상시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 아동과 부모의 접근성과 편의성의 제고하는 방문돌보미 서비스, 시간제 보육 확대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육아휴직 급여의 대상자와 지급액 확대
-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과 고령·고위험 산모, 고위험 신생아(미숙아) 지원 확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적용기간 확대 등 출산지원 정책 강화

2. 등록금 부담 없이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 고교 무상의무교육 추진
- 초·중등 의무교육 기관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실시
- 대학등록금을 50%로 줄여 반값등록금 실현
-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등록금 후불제’로 통합·일원화하고 이자율 인하

3. 사교육이 필요 없는 공교육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일관성, 지속성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 입시준비형 자사고 등 MB식 고교서열화 폐지 및 정상화, 일반고교 상향평준화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 등 고등학교 체제 혁신
- 학교폭력 예방 조치와 피해자 보호 강화, 가해자 엄중처벌 등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 ‘국·공립대학 연합체제’ 구축을 통해 대학서열화 해소
- 국·공립대학 비중 확대로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
- 도·농간, 소득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등 교육복지 확대
- 대학입학 기회균형선발제 확대를 통한 교육의 사회통합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
- 고령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생애능력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

4. 돈 때문에 병원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비보험 진료 급여화와 입원 진료비 보장률을 90%로 높여 의료비 부담 경감
- 입원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100~200만원으로 인하
- 환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수준 제고
- 노인틀니와 치석 제거 급여화 유지 및 적용대상 확대 등 치과진료비 부담경감
-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의 무상지원
- 절대빈곤층 건강보험료 면제 등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 현대화된 공공병원 확충 및 공급과잉 의료자원의 적정화 추진을 비롯한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
- 도시보건지소와 농어촌지역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확충을 통한 평생 건강관리 제공
- OECD평균 수준으로 보건의료인력을 확대하고 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갖추어 외상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20% 이하로 축소

5. 집이 더 이상 서민들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인구 1천명당 주택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호까지 확대하고 실수요자형 주택공급 확대로 중산서민의 내집마련 꿈 실현
-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2만호 공급하여 2017년까지 OECD수준 도달
- 무주택 빈곤층에게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제도 실시
- 1인가구, 노인, 대학생 등에 특화된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
- 주민갈등 조장하는 뉴타운, 재개발 제도 개혁

6.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
- 학대받는 아동, 소년소녀가장, 실종아동, 탈시설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강화
- 독극물 대응센터 구축, 어린이병원 지원등을 통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 공휴일과 방과후 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
-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의 청소년 일터환경을 개선하고 유해게임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7.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여 수급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의 탈수급확대를 위해 자활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계 강화
-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과 급여수준 확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 강화
- 복지수요자 중심으로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예산낭비적 요소 제거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을 통해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차질없이 준비

8.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립
- 장애인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현실화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
- 장애유형과 특성별 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 대중교통수단(저상버스)과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 소수·중증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의 일자리 확충으로 장애인의 근로권 보장
-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시·청각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보

9. ‘효도하는 민주통합당’이 되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 대상자 80% 확대로 노후소득 보장
-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일자리 확대와 정년을 60세로 연장 추진
- 건강 100세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패키지’ 시행
-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관리 내실화
- ‘정신건강지킴이’ 체제를 갖추어 노인 정신질환 및 자살사고 사전예방
- 낙상 등 사고요인을 제거하여 노인안전사고 획기적 경감
-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

10.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성평등기본법을 제정하여 MB정부에서 후퇴한 성평등 정책 강화
-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등을 통해 ‘좋은 여성일자리’를 늘려 여성고용률을 현재 53%에서 선진국 수준인 65%로 제고
- 간병인, 기사도우미 등 30여만 명의 가사노동자들의 근로자 인정을 통한 사회보험 적용 등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조성
-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 여성폭력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 산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 지원 확대
- 미혼모, 결혼이주여성 등 여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한반도에 평화의 화장!

이 땅의 100%를 위한 평화시대가 열립니다



(비전4)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3대 정책약속

1. 북한으로 인한 불안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겠습니다.

- 남북평화·경제번영·통일로 나아가는 실천방안인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 선언을 이행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며 '남북국회 회담' 추진
- 남북 주도의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
- 한반도 안보불안의 핵심요소인 북핵문제를 6자회담 등을 통해 해결
- 서해상에서의 긴장과 대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해를 평화경제 협력지대로 전환
-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과 동아시아 공동체(EAU : East-Asia Union) 기반 구축

2.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 잘 사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교류협력 활성화로 한반도 평화·통일 증진
- 북한 내 평화경제특구 관련 협력 확대 및 북방경제 3대 SOC 사업 추진
- 5·24 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자원협력 강화
-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3. 안심하고 보내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 사병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및 참전수당 인상 등 보훈 지원 강화
- 군 의료 서비스 확대 및 인권 증진
- 현역병 복무 중 학점 취득 확대
- 제대 군인 취업지원 강화 및 군인 정년 단계적 연장
- 직업군인 복지 향상

지방도 수도권도 화장!

99% 지역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열립니다



(비전5) 성장동력 확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정책약속

1. 대한민국을 '과학기술·IT 강국' 으로 키우겠습니다.

- '과학기술부'를 부활하여 국가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 도모
- 기초 R&D와 지방 R&D 투자 비중 확대
- 과학기술의 공공성 강화로 지속가능한 건강 사회 구축
- 이공계 우대와 이공계 출신 취업지원 확대 등 과학기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인력 일자리 확대
- ICT 통합기후 설립과 IT·SW 생태계 구축을 통해 'ICT강국 KOREA' 재건
- 벤처·창업 활성화와 1인 창조기업 지원
- 모바일·인터넷 콘텐츠 개발 지원 등 모바일·인터넷 기반 신성장산업 적극 육성
-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스마트워킹(smart working) 활성화로 업무 효율성 증대
- 문화·관광·금융·의료 등 서비스 산업 적극 육성

2. 지방과 수도권이 골고루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에 '지방분권 특별위원회'설치,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 지방분권 강화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국고보조사업 제도와 지방교부세제 개편,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 및 지원방안 재정립 등 지방의 재정능력 향상
-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방안 강구

3. 전국 방방곡곡 권역별로 특성을 키우겠습니다.

- 국민의정부의 지방분권 철학과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철학을 바탕으로 16개 시도별로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

◀ 6대 권역별 공통 지원 분야 ▶

수도권 : 주거복지 · 대중교통 강원권 : 동계올림픽 기반조성
 충청권 : 세종특별시 정착지원 영남권 : 신공항 건설
 호남권 : 고속철도 조기완공 제주권 : 국제관광도시 기반구축

서울특별시

-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지원 확대
-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서울 건설

- 노후한 지하철의 시설 보강 등 편리하고 쾌적한 서울교통 조성
- 쾌적하고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 시민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도록 안전한 수돗물 만들기 적극 지원

인천광역시

- 10.4 정상선언의 합의에 따라 서해를 평화경제 협력지대로 전환
-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 적극 지원
-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 인천을 수도권의 관문 항만으로 육성
- '부평미군기지' 이전부지의 공원화 등 지역 현안사업 적극 지원

경기도

- 지역특성에 맞게 평화 · 경제 · 생태벨트 조성
- 남 · 북간 광역교통망 구축 및 동북아 · 유라시아 연계 교통망 추진
- 경기북부 미군반환 공여지를 통일관련 연구기관 유치 등 통일의 상징으로 개발 추진
-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 교통 시스템 구축 지원
- 제2서울외곽순환도로 조속한 완공 추진

강원도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 금강산관광 재개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접경지역 경제 회생

- 수도권 1시간대 접근, 도내 2시간대 생활권 완성을 위해 광역 복합 교통망 확충
-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수계기금관리위원회 운영에 주민대표 참여 및 지역이견 반영 강화
- 영서지역 중소산업단지과 원주 의료기기 특화단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전광역시

- 성공적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기초과학의 메카로 육성
-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하여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활용 방안 마련
- 대역R&D특구 정부출연연의 무분별한 통폐합을 지양하고 독립성 보장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지원
- 대청호를 활용하여 녹색관광 벨트조성

충청남도

- 지역특화산업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충남경제 내실화 추진
- 경쟁력있는 농업, 지속가능한 농촌 실현
-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지원
- 도청이전지역인 내포신도시의 조기안착, 충청광역권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주민 지원

충청북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확충 적극 지원

- 충북을 '남부·북부·중부' 등 주요 권역별 신성장산업과 역사·문화·자원 중심의 거점개발을 통해 균형발전 추진
- '혁신도시, 오송첨복단지, 청주공항활성화' 등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등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 지원

부산광역시

- '해양수산부' 부활, 글로벌 해양수산 허브도시로 육성
- 해양친수공원으로 부산북항재개발 추진
- 세계적인 해양·항만 금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아시아 최고의 '영화·영상도시'로 육성
- 낙동강하구둑 개방 등 지역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울산광역시

- 자동차·조선해양·석유화학·기계산업 등 기간산업의 첨단화 및 고도화 적극 지원
-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지역 인재 육성의 산실로 적극 지원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
-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문화도시 조성
- '울산 KTX역'이 관광울산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대구광역시

- 학교폭력없는 교육문화도시 대구 만들기 지원
- 'K-2 공군기지' 이전

- 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과학산업단지 등 신성장동력 거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등 공연중심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대구 조성
- 전통산업과 미래산업의 조화를 통한 지역발전 추진

경상남도

- 진주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서부경남 발전의 토대 마련
- 부산도시철도 양산선 건설,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 등 도민을 위한 빠르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조기 구축 지원
- FTA로 쓰러져가는 경남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 지원
- 낙동강 수질 개선사업과 주변 생태계의 체계적 관리 등 친환경 낙동강 살리기 적극 지원
- 마산로봇랜드,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등 지역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경상북도

- 그린에너지와 녹색산업이 연계되어 경북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지원
- 활력있는 농촌 건설과 국내 최대의 생명자원을 보유한 경북의 농어업이 생명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신라·가야·유교 등 3대 문화역사의 거점도시로 육성
- 지속가능한 울릉도·독도 만들기 적극 지원
- 도청이전 신도시의 육성과 사통팔달 경북 만들기 적극 지원

광주광역시

- 아리랑 종합센터 건립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지원
- 축구전용구장 건립 등 ‘2015 광주 하계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 광융합 산업클러스터, 차세대다목적 가속기 건립 등 과학산업도시를 위한 지원 확대
- 5.18아카이브 조기완공 등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육성
- 경전선 전철화,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지역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전라남도

- ‘2012 여수엑스포’와 ‘2013 순천만정원박람회’의 차질 없는 개최 지원
- ‘F-1 자동차경주대회’ 적극 지원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확충 적극 지원
-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방 등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관광활력도시 적극 추진
- 항공우주·에너지·친환경 등 지역별 특화 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전라북도

- 새만금을 대한민국 꿈의 명품도시로 육성
-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부응하는 산업단지 조성 추진
- 전북의 핵심인 농업과 농촌 살리기 적극 지원
-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동서횡단철도 등 지역 현안 교통망 확충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 판소리, 한식 등 대표적인 한류문화와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통해 문화와 관광이 살아 숨쉬는 전북으로 육성

제주도

- 강정 해군기지 건설문제의 완전한 해결
- 국가기념일 지정 등 4·3문제의 완전한 해결 추진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육성지원책 발굴
- 행정구조 개편을 통한 제주형 자치모델 완성 및 제주신공항 적극추진

내일의 삶이 환경 화장! 작!

99%를 위한 지속가능한 삶이 펼쳐집니다



(비전6)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5대 정책약속

1. '토건국가'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겠습니다.

-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사후관리 강화
- 토건주의 극복을 위한 국책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도입
- 파괴된 4대강 생태계의 친환경적 재자연화를 추진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는 대형보의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대책 강화
- 4대강 수변구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계관리위원회에 주민대표의 참여 추진

2. 원전중심이 아니라 안전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 원전 확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설계수명 종료 원전 가동을 연장하지 않는 등 원전의 안전대책을 획기적으로 강화
- R&D, 세제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2030년까지 20%로 확대
-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시행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추진

3.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수도권 대기관리를 강화하고 도심 숲 조성, 녹지총량제 도입 등을 통해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아토피 피해 저감대책 강화 및 치료센터 확대
- 철저한 석면석재 관리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 현실화 추진
-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반적인 재난관리와 대응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재난관리능력의 획기적인 제고
- 민생치안 역량 강화, 소방의 대응능력 향상, 시설물 안전 보강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4. 언론의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 MB정권이 붕괴시킨 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 등 제도혁신
- 권력에 종속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 개편
- 익명 표현의 자유 및 개인의 위치정보 보호
- 시청자 권익보호
- 신문산업 및 지역언론 활성화 지원 확대
- EBS의 공적 역할 강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확대

5. 생활 속에서 문화가 꽃피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 한류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영토 확대
- 문화·여가바우처 확대로 ‘보편적 문화 복지’기회 확대
- 지방의 문화 인프라 확대 및 문화 접근권 확보
- 문화예술의 기본바탕인 순수예술분야 지원 확대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문화재 관리의 선진화
- 비무장지대(DMZ)의 세계복합유산 등재 추진
- 생활체육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통해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 조성
-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여 여가문화 생활 활성화

공정한 세상이 화장작!

99%에게 공정한 세상이 열립니다



(비전) MB 역주행 심판과 권력 개혁을 위한 3대 정책약속

1. MB정부의 잘못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 MB정권 온갖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 4대강 공사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
- 한·미 FTA는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재협상 관철
- MB정권의 종합편성채널 승인 및 특혜 지원 심판
- 집회 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2. 검찰이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대검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국가수사국 설치,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등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성
- 국민참여재판 확대, 법관인사제도개편, 노동법원설치 검토 등을 통해 재판과 사법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검사작성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공직자와 재벌범죄에 대한 특권폐지, 퇴임판검사의 특혜폐지, 군사법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장과 공평한 법환경 조성

3. 깨끗한 국회, 일 잘하는 정부로 만들겠습니다.

-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제한, 1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국회의원의 직무정지 등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
- 국회 날치기 처리 및 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국회 예결특위의 상임위화를 통해 상시 예산 감시 기능 강화
- MB정부에서 무리하게 통폐합된 정부조직의 정상화와 기능 복원
-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된 취업제한 대상 기관 소속 인사의 2년 내 장차관 임용배제 등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
- 재정개혁을 통해 소비성, 중복성,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무분별한 대형토건사업을 억제하며 대규모 국책사업의 타당성 조사 강화

재정건전성이 화장작!

7대 비전은 재원이 뒷받침 된, 바로 시행 가능한 약속입니다



7대 비전 실현에 필요한 소요 자원 조달 방안

- ▶ 기본 방향: 새로운 세목 신설 없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7대 비전' 설정
- ▶ 7대 비전 실현을 위한 소요자원 규모: 5년 연평균 약 32조원
 - '3+1 보편적 복지' 실현: 16.9조원
 - 무상급식(0.94조), 무상보육(2.56조), 무상의료(8.55조), 반값등록금(4.8조)
 - 일자리 복지, 주거복지, 기초노령연금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13.0조원
 - 일자리 복지(4.5조), 주거복지(3.2조), 기초노령연금(2.9조원), 고교 무상교육(1.3조) 등
 - 기타: 2.1조원
 - 사병사회복지 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역현안사업 지원 등
- ▶ '재정·복지·조세' 3대 개혁을 통한 추가 자원 조달 규모: 34.8조원
 - 재정개혁 11.2조원 + 복지개혁 6.4조원 + 조세개혁 17.2조원 = 34.8조원
 - 조세부담률이 2017년 21.6%로 회복되어 '적정부담·적정복지' 재정기반 마련 (OECD 평균 조세부담률 약 25%)

Ⅰ 재정·복지·조세, 3대 개혁을 통한 추가 자원 조달 규모 Ⅰ (단위: 조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재정개혁 (A)	8.55	11.08	11.57	12.12	12.70
복지개혁 (B)	2.33	5.86	7.43	7.97	8.39
조세개혁 (C)	11.41	13.97	16.20	19.60	24.93
추가 가용자원 규모(D=A+B+C)	22.29	30.91	35.20	39.69	46.02